

## [토론 요지]

## 세미나 토론 요지

김 흥 철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사무국장  
환경정의 대안사회국장

## □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환경적 측면의 우려와 문제점

- 수도권 규제완화가 과밀억제, 성장관리권역은 물론 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수도권규제완화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완화’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수도권 입지규제가 추가로 풀릴 경우 10조8천4백억원의 공장설립 투자계획 중 자연보전권역 10조4천억원, 성장관리권역 3천5백억원, 과밀억제권역이 약 6백억원 추정(2009, 전경련)
- 수도권 규제완화가 환경관련 규제완화로 확대되고 있음
- 팔당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II권역에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고 구리등 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이 제한되었나 무방류 조건으로 환경부에서 입지허용(2008)
- 환경문제에 대해 일차적 책임이 있는 환경부는 관련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 항상 기업의 입장과 논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
- 이러한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인한 피해는 수도권 시민들,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수도권 서민들이 피해를 감수 하고 있음(대표적으로 수도권 집값, 전세값 폭등)

## □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 ‘수도권규제’관련해서 많은 논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수도권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계는 여전히 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음
- 김용웅(도시및 지역계획박사)의 발표에서 보면 기업의 해외이전이 근본적인 원인이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국내 수요부진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 확보, 생산비용 절감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전문가 연구, 그리고 기업의 솔직한 생각으로 보면 수도권 규제가 완화 되면 수도권으로의 공장이전과 신·증설이 확대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수도권 규제가 유지되거나 강화된다고 한들 이것이 곧 지역으로의 기업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되는 문제도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에서 기업의 선호는 수도권이 우선 순위일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문제(과밀·집중에 따른 생산성 저하,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수도권의 또 다른 선택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 수도권 문제의 계획적 관리

- 현재의 수도권 관리 문제는 비수도권과의 관계, 즉 수도권으로의 기업의 입지, 공장의 신·증설 허용 등 기업의 지방이전과 발전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지역의 경제를 위축시키는 경제적 측면의 문제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수도권 집중·과밀 문제에서 보면 수도권의 산업·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 환경, 주거, 교통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함. 이는 수도권 과밀해소 문제가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연계되어야 하지만 직접적인 대응 및 수도권관리의 문제에서는 별도로 대응이 필요하기도 함
-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관리 문제를 도시계획으로 반영되어 실효성을 갖게 하고 각종 계획이나 개발의 지침역할을 할수 있도록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의 통합을 제안하는 변창흠 교수의 내용은 전략적인 대안으로 검토가 필요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제의 문제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의 문제로 궁극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표자들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 첫 번째는 ‘균형발전’의 기본단위 설정의 문제임. 이에 대해서 변창흠(세종대교수)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인 균형발전모델이 아니라 ‘광역경제권’ 단위의 균형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수도권도 물론이지만 각 지역별로 논쟁과 토론이 필요

- 두 번째는 ‘지역특성화 발전’에 근거한 상생발전이어야 함. 지금의 ‘수도권 중심의 (국가)경쟁력 강화론’이나, ‘선지역균형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입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로 수용되기 어려운 입장 차이가 있음.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광역단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세 번째 문제는 ‘균형발전’에 대한 적절한 관리지표와 허용기준의 문제, 변창흠은 이에 대해 인구비율, 경쟁력 지표, 환경총량등의 관리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이 서로가 균등하게 발전하자는 것이 아닌 ‘균형발전’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용인되는 지역간 격차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관리되어야 할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를 합의하는 문제가 중요. 특히 균형발전은 비현실적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에서 발전의 격차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격차정도면 심각하고,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 필요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

- 기업은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루어진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대부분,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
-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 전체를 산업단지화 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이 수도권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 주체여야 되고, 한편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발전정책 및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을 기업의 전략으로 적극 수용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일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